# 전남 여성 구직자 급증 … 일자리 찾기 힘드네

### 道일자리종합센터 조사 … 40대 이상 재취업 나서 취업자 대부분 경비·청소 등 직종 근무 저임금

련, 노후 준비 등 다양한 이유로 '직장 구하기' 에 나서고 있다. 여성 취업자들은 주로 경비 및 청소,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 분야에 종사 하며 매달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0대 이상 중장년 여성 구직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1일 전남도일자리종합센터에 따르면 지난 달 전남도 전체 신규 구직자 수는 7822명으로,

전남도 여성들이 경력 축적, 자녀 교육비 마 이 가운데 여성이 4651명으로 남성(3171명)보 다 더 많았다. 5년 전인 2000년 2월 남성 구직 자가 2311명, 여성 구직자가 2426명으로, 비슷 한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 구 직자가 큰 폭으로 늘었다.

> 여성 구직자 가운데 40대 이상이 전체의 3분 의 2인 2949명으로, 60세 이상도 973명이나 됐 다. 40대 이상 남성 구직자가 1775명, 60세 이 상이 673명으로, 여성 고령자들의 노후 준비가

그만큼 취약하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전남일 자리종합센터는 지난달 여성 구직자 2989명, 남성 구직자 516명의 취업을 알선했으며, 여성 은 3518명, 남성은 1230명 등 4748명이 일자리 를 찾았다.

센터를 통해 일자리를 얻은 취업자의 직종 별로 살펴보면 경비 및 청소가 1923명(남 101 여 1822)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영·회계·사무 635명(남 110 여 525), 보건·의료 600명(남 18 여성 582), 건설 204명(남 184 여 20) 등이 그 뒤 를 이었다.

취업자의 임금 수준은 120만~150만원 1885명(남 187 여 1698), 150만~200만원 1827

명(남 339 여 1488) 등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200만원 이상 고수입 취업자의 경우 793명 가운데 남성이 627명으로, 여성(166명) 보다 월등히 많았다. 일자리를 찾는 여성 구직 자들은 많지만, 대부분 경력과 관련 없는 직종 에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일자리종합센터 관계자는 "가정 경제 가 어려워지면서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재취업 에 나서고 노후 준비가 안 된 여성 고령자들이 인력시장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라며 "그러나 저임금을 받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 분"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강진·순천서 이동신문고 운영

"억울한 사연 두드리세요"

강진군과 순천시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운 영하는 '이동신문고'가 잇따라 열린다.

11일 강진군과 순천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 원회는 18일 강진군청에서 강진, 장흥, 영암, 완도 등 4개 군 지역 주민 고충 민원을 현장 상 담하는 이동신문고를 연다.

또 오는 20일 순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순 천, 보성, 곡성, 고흥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 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전문 조사관·변호사 등으로 구성한 상담반 은 주민 고충과 애로사항은 물론 모든 행정분 야 부패신고를 받는다.

제도권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회복지 분 야, 소비자 피해 구제, 민·형사·호적·상속 등 생활법률, 은행·보험·증권·사금융 등 금융피 해 분야도 상담한다. 각 시·군 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이동신문고' 상담 예약 신청을 받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새봄 ... 나무를 심읍시다

11일 오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뒤 녹지대에서 전남도와 한전 KPS, 지역주민 등 600여명이 새봄을 맞아 나무를 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4·29 보선 현장**

#### 조영택, 경선 앞두고 막판 득표활동

4·29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예비 후보는 오는 14일 열리는 당 내 경선을 앞둔 11일 공약 점검 및 출근길 인사, 상 가 방문 등 막판 활발한 득표 활동을 벌

조 예비후보는 "서구 주민과 당원의

열성적인 관심과 성원 덕분에 자신에 대한 기대와 지지가 눈 에 띄게 상승하고 있다"며 "당원과 유권자 분들이 현명하고 냉철한 판단으로 본선 경쟁력이 가장 뛰어난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 김하중, 선거사무실 개소식

4·29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김하중 예비 후보가 11일 선거 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세몰이에 나섰다.

광주 서구 금호동 풍금사거리에 선거 사무실을 마련한 김 예비후보의 사무실 개소식에는 500여명의 지지자들이 참석

했다. 지지자들은 후보 경선에 임하는 김 예비후보를 격려했

김 예비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지지를 얻어 경선은 물론 본선에서도 승리하겠다"고 화답했다.

### 조준성 "전략공천은 절대 안돼"

새누리당 조준성 예비후보는 11일 최 근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마설과 관련 "전략공천은 절대 안된다"고 주장 했다. 조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 서 기자회견을 하고 "중앙당에서 광주 서 구을 보선에 무늬만 호남 사람을 전략공 천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흘려보내고 있

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 예비후보는 "정 처장은 허위공문 서 작성,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소돼 있다"며 "이런 사람 을 공천하는 것은 야당에 빌미를 주고 새누리당의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

### 전남도민 10명 중 6명 어려운 살림 출산 꺼려

#### 전남복지재단 948명 설문조사

전남도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저출산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

11일 전남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20일부터 8월29일까 지 전남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49세 이하 남녀 948명을 대상으 로 저출산에 관해 설문조사 한 결과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응 답자의 40.9%가 '양육 및 교육비용의 상승'을, 25.3%가 '경기불 황과 실업률의 증가'를 각각 꼽았다.

응답자의 66.2%가 경제적 이유로 저출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일하는 여성의 증가'(16.4%), '개인적 성취를 중시하는 의식의 확산'(12.3%) 순으로 저출산 원인을 들었다. 또 저출산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과 관련해 응답자의 86.3%가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 38.6%·다소 심각하다 47.7%)고 답했다.

출산 장려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응답자의 49.5%가 '노 력하고 있지 않다'(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 25.1%·대체 로 노력하고 있지 않다 24.4%)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 산 장려를 위한 필요한 사회적 지원과 관련해 '양육의 경제적 지 원'(33.7%), '결혼지원'(32.2%), '일·가정 양립 지원'(14.5%), '양 육 인프라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7.6%), '임신 및 출산 지원' (7.5%) 등을 꼽았다. 이상적인 자녀 수에 대해 생각은 '2명'(43. 7%), '3명'(36.6%), '4명 이상'(13.4%), '1명'(5.8%) 순이었지만, 현실적인 자녀 수는 '2명'(57.5%), '1명'(22.4%), '3명'(14.8%), '4 명 이상'(1.6%) 순이었다. 결혼 적령기는 남성 응답자의 64.7% 가 '30대 초반', 18.0%가 '30대 중반'을, 여성 응답자의 42.0%가 '20대 후반', 36.6%가 '30대 초반'으로 생각해 남·여 편차가 있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교육청 무분별 정책용역 못한다

#### 광주시의회, 정책연구 운영 조례 가결

그동안 교육정책 연구·개발이라는 명분 등으로 무분별하게 남발됐던 각종 용역발주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광주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는 11일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광 주시교육청 정책연구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가결

이 조례는 시 교육청이 발주하고 자 하는 각종 정책연구 용역 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 예산 낭비 등을 막는 것이

또 용역의 사업계획, 용역비의 적정성 등도 따지게 된다.

사업비 1000만원이 넘는 용역은 11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의 사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업무 담당부서장 등 당연직 3명과 외부 전문가 8명으로 구성한다.

시 교육청은 용역 예산과 과제 선정에 앞서 국가나 지자체, 학 계 등에서 이미 연구한 실적이나 자료 등 유사성과 중복성을 여 부를 파악해야 한다.

또 용역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 용 역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용역 결과 활용 방안 등도 제출해야

조례안을 발의한 유정심 교육위원장은 "이 조례 제정의 의 미는 특정 교육정책 추진 등을 위해 이른바 구색 갖추기나 맞 춤식 용역을 하는 것도 견제할 수 있고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용역에 따른 예산 낭비를 막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